

한국에서 거주지 이전이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지병근*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사례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정당 선호와 투표성향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지방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와 투표 가능성이 과연 그리고 얼마나 완화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에 거주할 경우 양대정당에 대한 선호도 격차와 정당편향적 투표성향이 완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주에 따른 양대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도 격차의 감소폭은 영남출신 유권자들보다 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이들에 대한 투표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은 영남출신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는 거주지 이전이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와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 사이에는 상당한 '불균형(disparity)'이 존재하며 '지역주의적 투표'의 완화를 통해 합리적인 정치적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요구와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모색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제6회 지방선거, 정당선호, 지역주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병근(E-mail: jbkko@gmail.com)
학위취득대학: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현직: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3698).

논문접수일 : 2016년 7월 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22일

한국에서 거주지 이전이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51

The Impact of Changing Residential Areas on Partisan Preference
and Voting Decisions in South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Youngnam and Honam Voters in
the 2014 Regional Election

Jhee, Byong-kuen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impact of changing a citizen's residential area on both partisan preferences and voting decisions of Youngnam-born and Honam-born voters in the 2014 regional election of South Korea. Analyzing the post-election survey data of the KSDC, it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strong partisan preferences and the "regional voting" of Youngnam-born and Honam-born voters for the Saenuri Party and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wo regional parties of Korea, have waned when they move to other regions. Test results show that a notable "residential movement effect" (RVE) exists. More interestingly, this study shows that Honam-born voters have a stronger RVE on their partisan preference, but a weaker RVE on regional voting than Youngnam-born vo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parity between movement effects on the party preference and on voting decision implies that institutional design to avoid distorting voter preferences is required for promoting rational political citizenship through the weakening of regional voting.

[key words] *local election, partisan preference, regionalism, 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I. 서론

민주화 이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져온 한국의 주요정당들은 각각 영남 및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일방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영호남 지역에서 거의 모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호남 지역은 또다시 일당이 지배하는 정당체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지방의회-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대 '지역정당'의 근거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양대정당에 대한 정당선호와 투표결정에 거주지 이전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관한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은 역대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영호남 출신 및 거주 여부가 투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을 포함한 출신지와 거주지의 조합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정당선호와 투표성향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이하 KSDC)의 지방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와 투표 가능성이 과연 그리고 얼

마나 완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호남출신의 거주지이전 효과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영호남 지역은 물론 수도권 등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투표결정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의 다양성은 물론 이들의 선택이 한국의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II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했던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편향성에 관한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이 이들의 정당선호 및 투표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III장과 IV장에서는 KSDC의 지방선거후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거주지별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행태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V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II.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편향성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대부분의 선거연구들은 영호남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정당편향성이 지역감정이나 지역정체성,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 및 정치인에 의한 정치적 동원, 그리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감 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조기숙 1997; 박상훈 2001; 김욱 2004a; 김욱 2004b; 최준영·조진만 2005; 하세현 2005; 오관석 2009; 김진하 2010; 강원택 2010; 지병근 2013; 지병

근 2015a).¹⁾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호남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이나 지역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연고가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투표할 가능성 또한 크다; 아울러, 영호남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동일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이들이 주도하는 정당의 선동에 취약하며, 이들이 집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들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이들의 주장으로부터 영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물론 이 연구가 주목하는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 또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정당에 대한 이들의 선호와 투표가능성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타지로 이주한 영호남출신들은 출신지에서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서 지역정당 혹은 지역정치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이들은 출신지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늘리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

다.²⁾

그러나 이러한 추정과 달리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주(migration)가 이주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치사회화의 고전적 이론들, 특히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치적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 이유는 “초기에 습득한 내용과 모순되는 메시지들을 피하거나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소요해야하는 “비용”을 지출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박정서 2012, 95). 이주자 집단에 대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과정에서 제기된 주장들 또한 대체로 상이한 정치문화를 갖고 있던 이들이 쉽게 이주지역의 정치문화에 동화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였다(고상두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의 이전이 정치적 태도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정치사회화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경향들, 즉 ‘노출이론(exposure theory)’ 혹은 ‘전이가능성이론(transferability theory)’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노출빈도가 많거나 수용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이주한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거나 축적된 정치적 경험이 많을 경우 이주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서 재사회화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³⁾ 따라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청소년기 이후 타지로 이주한 영호남

1) 지역균열에 기초한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 정당체제에 미친 영향 등은 정치학의 오래된 연구분야들이다(Schattschneider 1942; Jensen 1951; Lipset and Rokkan 1967).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권자들과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익에 기초하여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밝혔다(Hueglin 1986; Jordan 1994; Sasse 2010). 미국의 경우에도 노예제를 둘러싼 전통적인 남부와 북부의 균열과 함께 지역개발관련 법안을 둘러싼 갈등에 기초하여 유권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정당의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졌다(Schattschneider 1942; 양재열 2006).

2) 김성모·이현우(2015, 245)는 타지에 거주하는 “출신지 비거주자”는 “이주해온 지역의 특성과 출생한 지역의 특성”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 대한 1차적 목적이 교육 또는 경제활동 등이기 때문에 문화적 동화의 가능성이 출신지 거주자들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였다.

3) 정치사회화에 관한 주요 이론적 경향에 대해서는 박정서(2012)를 참조할 것.

출신들 또한 출신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편향적인 선호나 투표성향 등 기존의 정치적 성향이 약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호남출신 유권자들을 예로 들어 이들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당선호 및 투표의 편향성 강도를 출신지역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호남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 및 투표의 강도 추정

		거주지역	
		호남	비호남
출신지역	호남	고(A)	중고(B)
	비호남	중저(C)	저(D)

이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편향성의 수준은 (A) 호남출신 가운데 호남에 거주하는 이들이 가장 높으며, (B) 호남출신이지만 비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C) 비호남 출신이지만 호남에 거주하는 이들, (D) 비호남출신이며 비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거주지에 따라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새누리당에 대하여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A>B>C>D).

하지만, 이들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이 <표1>과 같은 예상을 따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에 거주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확장과 KTX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어렵지 않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정보화 시대’에 빈번하게 동향인들과 온라인을

통해 접촉하거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향우회 등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지역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은 타지에 거주하더라도 출신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경제적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의 형태로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의 소비 혹은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타지 거주자들(B)이 출신지에 거주하는 이들(A)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당선호와 편향적인 투표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고전적인 정치사회화 이론이 제기한 것처럼 거주지 이전이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A≒B).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투표결정이 항상 정당선호와 선형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당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더라도 타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들이 지역정당에 대한 투표결정을 중단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A≒B). 오히려 출신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A)의 항의 투표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영호남출신의 유권자들(B)에게서 더 강한 정당편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A<B).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극히 일부 경합지역을 제외하면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 혹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지역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왔다. 따라서 영호남출신으로 출신지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는 유권자들(A) 가운데 일부는 양대 지역정당을 가장 선호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순수투표(sincere voting)’로는 선거결과에 거의 영향

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항의투표(protest voting)’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⁴⁾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선호순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이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소위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선택할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⁵⁾

이들의 투표행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타지에 거주하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B)이 영호남에 거주하는 타지출신 유권자들(C)보다 더 강한 정당편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타지 출신이지만 영호남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영호남의 지역정당 및 거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특유의 정치문화에 동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여러 선거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거주 지역의 이익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영호남출신보다 지역정체성은 약할 지라도, 때로는 거주지역의 이익실현을 위한 정당편향적 투표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B<C).⁶⁾

4) 영호남 지역의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반대로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보다 순수투표를 실행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병근(2014a)을 참조할 것.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주노동당과 그 후계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치환경과 무관하지 않다(지병근 2014c).

5) 이는 ‘지역주의적 투표’의 강도가 단순히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도나 지역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 당선가능성과 같은 선거경쟁의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도나 지역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지라도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과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와 항의투표의 규모가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정치(real politics)의 측면에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들의 정치적 응집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투표행태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정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거주지별 영호남출신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부록1-1>, <부록1-2> 참조).⁷⁾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출신의 정치적 특성이 거주지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지극히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김영태(2009, 72)는 집합적 자료와 여론조사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1998년 제15대 대선, 2002년 제16대 대선, 그리고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영호남출신 유권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 각각

6) 다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아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호남출신이 총인구의 10.3% 정도이며 호남거주인구 가운데 비호남출신 인구가 10.4%정도였다. 따라서 1000명의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10명 내외의 피조사자만이 호남출신에 대한 분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영남출신에 대한 분석대상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동일조사에서 영남출신은 총인구의 26.2%를 차지하였으며, 영남거주자 가운데 비영남출신 인구는 12.1%였다.

7) 2014년 지방선거 시기 호남지역의 인구수는 526만 명으로 대구·경북지역(520만 명)보다는 약간 많지만, 부산·울산·경남지역(803만여 명)은 물론, 충청지역(530만여 명)보다 적다. 그런데, 유권자 수만 보면 호남의 유권자는 419만여 명으로 충청권(422만여 명)은 물론 대구·경북지역(422만여 명)보다 적다(<부록1-1>).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총인구(4,749만여 명)의 10.3%가 호남거주자 그리고 26.2%가 영남거주자였으며, 17.8%가 호남출신(847만여 명) 그리고 29.9%(1,419만여 명)가 영남출신이었다(KOSIS 국가통계포털, <부록1-2>).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1998년 이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지지성향을 보여온 영남출신 유권자들과 달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은 약화되었으며, 그 이유가 이들의 이념적 “중도화”와 함께 노무현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성모·이현우(2015, 254)는 “출신지 거주자”와 “출신지 비거주자” 그리고 “거주지 비출신자”로 지역구분을 세분화하고 2012년 총선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선호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호남인의 이념강도가 출신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 비출신자의 순위를 따르고 있으며,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남인의 이념강도의 순위 또한 동일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호남인 및 영남인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의 순위 또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은 출신지를 고려함으로써 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지역주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김성모·이현우 2015, 255-256).⁸⁾

이 연구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거주지 이전에 따라 약화될 것이

라는 아래의 가설 1-1과 가설 1-2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영호남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들(C)의 사례수가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호남출신 가운데 출신지 거주자(A)와 타지 거주자(B), 그리고 비영호남출신이며 비영호남 거주자(D)의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도 및 투표가능성이 $A>B>D$ 의 순서를 따를 것이라는 가설 검증에 초점을 둘 것이다.

가설 1-1. 영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와 투표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A>B>D$, 거주지이전효과 가설 1).

가설 1-2.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와 투표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A>B>D$, 거주지이전효과 가설 2).

아울러 이 연구는 영남출신보다 호남출신이 정치적 성향의 동질성이나 조직적 응집력에서 영남출신보다 더 강하다는 통상적인 인식과 관련한 아래의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가설 2. 호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이전효과가 클 것이다(거주지이전효과와 영남 우위 가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출신 유권자들 또한 호남출신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향우회 등을 매개로 정치적 동질성을 유지해왔으며, 호남향우회를 이용한 정치적 동원의 효과가 관제언론을 통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주지이전효과 역시 영호남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8) 영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타지에 거주하는 영호남출신의 투표행태를 구분하는 것은 비록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영호남의 ‘지역이익’을 통제함으로써 소위 ‘지역주의 투표’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하나인 합리적 선택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태(2009, 67)는 “지역주의 투표가 지역적인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출신지는 더 이상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III. 영호남출신의 정당 선호와 이념적 성향

1. 영호남출신의 정당 선호

아래의 <표2>는 KSDC의 지방선거후 여론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혐오-선호 차원에서 측정한 응답자들의 출신지별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0-10: 0=매우 싫어한다, 10=매우 좋아한다, 11점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신지 측정은 KSDC의 여론조사에 포

함된 “출생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첫째, 전국적으로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5.4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영남출신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호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5.29)는 새누리당 다음으로 높았으며, 통합진보당(3.62)과 정의당(3.59)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표 2> 출신지별 정당·정치인 선호도 평균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전국
정당선호	새누리당	5.13	6.12	3.63	5.90	6.11	5.41
	새정치민주연합	5.73	4.49	6.78	4.91	4.84	5.29
	통합진보당	4.09	3.25	4.43	2.93	3.25	3.62
	정의당	4.05	3.17	4.30	3.11	3.19	3.59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0.59	1.62	-3.15	0.98	1.26	0.12
정치인 선호	박근혜	5.73	6.81	4.23	6.87	6.40	6.08
	이명박	4.29	4.55	3.07	4.46	4.84	4.25
	문재인	5.47	4.57	6.56	4.70	4.95	5.18
	안철수	5.59	4.54	6.31	4.40	4.54	5.09
	김무성	4.95	5.44	4.29	5.03	5.35	5.04
	김문수	5.38	5.41	4.61	5.24	5.53	5.24
	정몽준	4.89	5.30	4.16	5.35	5.13	5.00
	손학규	4.88	4.59	5.75	4.65	4.79	4.89
	박원순	5.72	5.11	6.83	5.27	5.23	5.59

자료출처: KSDC 2014

둘째, 영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유권자들 가운데 수도권 출신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5.73)가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

(5.1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청 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그 반대였다. 그런데, 이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제외한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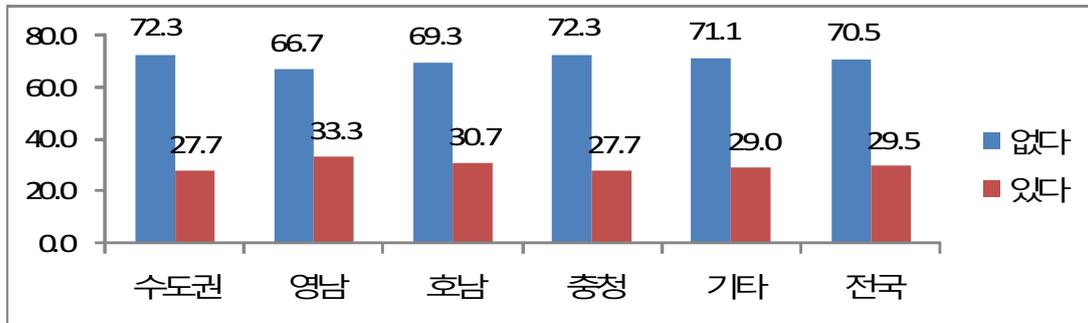
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된 반면, 충청지역의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승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선호도와 투표선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 사이의 격차는 호남출신 유권자들(3.15)이 가장 컸으며, 영남, 기타 지역, 충청, 수도권 출신 유권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호남출신 유권자들로부터 새누리당(3.63)은 통합진보당(4.43)이나 정의당(4.30)보다도 낮은 선호도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6.78에 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6.12)는 가장 높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4.49)는 두 번째로 높았다. 양당에 대한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선호도 사이의 격차는 3.15로,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1.62에 그친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영호남 출신 사이의 차이는 현격하였다. 호남출신

의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4.23과 3.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6.56과 6.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속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호남출신의 선호도는 매우 낮은 반면, 손학규와 박원순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남출신의 박근혜에 대한 선호도는 6.81에 이르렀으며,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등에 대해서도 5.3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낸 반면,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4.6 미만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다만,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이명박에 대한 선호도는 4.55에 불과한 반면, 박원순에 대한 선호도는 5.1로 비교적 높았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극히 편향된 선호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지역대표정당의 존재 여부 자료출처: KSDC 2014

위의 <그림 1>에서 잘 나타나듯이 영호남 출신의 유권자들 가운데 “지역을 정치적으로

대표해주는 정당”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출신의 유권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비록, 영남과 호남출신들 가운데 지역대표 정당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3.3%와 3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다른 지역출신들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전국 평균 29.5%). 이는 ‘지역정당’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지역출신들도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영호남출신의 이념적 성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응답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한 이념적 위치를 살펴보면 호남출신(4.23)은 가장 진보적인 이념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0-10: 0=진보, 10=보수). 이에 반해 영남출신의 이념적 위치는 6.19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기타지역출신(5.99), 충청출신(5.86), 수도권출신(5.25) 등이 따랐다. 영호남 출신의 이념적 성향 사이의 격차는 1.96이었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다도 호남출신이 다른 지역출신에 비해 비교적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포함된 10가지 이슈들 가운데 호남출신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보수적 주장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수준을 보였다. 이와 달리, 대북지원확대, 국가보안법폐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 사형제 폐지, 경제성장보다 복지에 더 힘을 기울일 것 등과 같은 진보적 주장에 대한 동의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출신지별 이념적 성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

이슈(0-10: 0=반대, 10=찬성)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전국
이념(0-10: 0=진보, 10=보수)	5.25	6.19	4.23	5.86	5.99	5.55
한미동맹	5.76	6.23	5.59	6.44	6.10	6.02
대북지원확대	4.40	4.36	5.06	3.83	4.29	4.39
국가보안법폐지	4.48	4.12	5.23	3.30	4.19	4.27
집시자유최대보장	6.10	5.96	6.16	4.85	5.26	5.80
사형제폐지	4.07	3.92	4.65	3.23	3.01	3.90
경쟁력강화교육	4.85	5.46	5.16	5.37	5.31	5.22
복지>경제성장	5.11	5.53	5.68	4.57	5.08	5.25
기업자율성	4.68	4.73	5.07	4.45	4.91	4.74
고소득자추가징세	7.12	7.24	6.72	7.59	7.39	7.19
공기업민영화	4.51	4.27	4.93	4.17	4.95	4.48

자료출처: KSDC 2014

하지만, 나머지 이슈들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와 같은 진보적 태도를 호남출신으로부터 찾아보기 힘들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 실시에 대한 동의 수준은 5.16으로 수도권출신(4.85)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그 외의 지역출신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부여에 대한 동의수준은 호남출신의 경우 5.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징세에 대한 동의 수준은 6.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기업민영화와 대한 동의수준 또한 기타지역출신(4.95) 다음으로 호남출신(4.93)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행정당들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남북교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노출되어온 호남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지병근(2014b)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IV. 거주지별 영호남출신의 정당선호와 투표결정

1. 거주지별 영호남출신의 정당선호⁹⁾

9) KSDC 2014 지방선거후 여론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부록 2> 참조). 비수도권의 경우는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출신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그 비율은 불과 33.0%, 인천 혹은 경기지역의 경우 37.8%에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95% 내외, 부산·울산과 충청지역의 경우 그보다 낮은 85.7%와 78.4%가 거주지와 출신지가 동일

아래의 <표4>는 영호남출신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와 이념적 성향을 11점 척도(0-10)로 측정하여 거주지별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영남출신 유권자들(a, b)의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보다 호남출신 유권자들(A, B)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한 반면,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보다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영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정당선호의 편향성이 현격하게 컸다.

하지만 정당에 따라 응답자들이 선호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호남 유권자들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자신의 거주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한 정당에 대한 선호는 다른 정당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개별정당에 대한 선호보다 이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이 높은 정당선호의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양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를 이용하여 거주지별 정당선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정당들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서 양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일관되게 영호남출신 가운데 출신지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타지로 이주한 이들의 경우 더 적었다. 이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하였을 경우 양당에 대한 선호의 편향성, 즉 영남출신 유권자들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경향성, 그리고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호하는 경향성

이 모두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4> 출신지 및 거주지별 정당선호와 이념적 성향

	출신지	거주지		출신지	거주지	
		영남	비영남		호남	비호남
정당 새누리당(a)	영남	6.0(a)	6.4(b)	호남	3.2(A)	4.1(B)
선호	비영남	5.0(c)	5.1(d)	비호남	2.7(C)	5.8(D)
	F 값		14.0**			42.9**
새정치민주연합(b)	영남	4.3(a)	5.1(b)	호남	7.0(A)	6.6(B)
	비영남	5.0(c)	5.7(d)	비호남	5.7(C)	5.0(D)
	F 값		29.5**			36.3**
양당선호도 차이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영남	1.7(a)	1.3(b)	호남	-3.8(A)	-2.4(B)
	비영남	0.0(c)	-0.6(d)	비호남	-3.0(C)	0.8(D)
	F 값		26.1**			56.2**
이념	영남	6.1	6.4	호남	3.9	4.6
	비영남	5.4	5.2	비호남	4.3	5.8
	F 값		16.3**			30.0**
사례수	영남	237	81	호남	81	77
	비영남	14	643	비호남	3	814

자료출처: KSDC 2014, ** p<0.01

둘째, 이와 같은 정당선호의 차이는 영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현격하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먼저 영남출신의 경우 출신지와 거주지가 모두 영남인 유권자들의 선호도 차이(1.7, a)가 가장 컸으며, 출신지가 영남이지만 거주지는 영남이 아닌 이들의 경우(1.3, b)와 출신지와 거주지 모두 영남이 아닌 경우(0.6, d)가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반해 호남출신의 거주지별 정당선호의 차이는 두배 가까이 컸다(-3.8, A; -2.4, B; -3.0, C; 0.8, D).

한편 영남으로 이주한 이들의 새정치민주연합 선호도(c, 5.0)는 영남출신으로 비영남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b, 5.1)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고 새누리당 선호도(c, 5.0)는 비영남출신으로 비영남에 거주하는 이들(d, 5.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으로 이주한 이들(C)이 비호남출신으로 비호남에 거주하는 이들(D)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선호도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선호도가 호남출신으로 호남에 거주하는 이들(a)보다 더 낮은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남으로 이주한 이들이 호남으로 이주한 이들에 비해서 지역의 정치문화에 제대로 동화되지 않았거나 거주지역의 이익실현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례수(영남 14명, 호남 3명)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또한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거주지별 영호남출신의 투표결정

아래의 <표5>는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출신지 및 거주지별 새누리당과 새

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한 이들의 분포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선거가 아닌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를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출신지 및 거주지 이외에 후보자 요인과 선거구 특성 등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출신지 및 거주지별 투표(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출신지	광역비례대표 선거				기초비례대표 선거			
		거주지				거주지			
		영남		비영남		영남		비영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새누리당	영남	142(a)	79.8	44(b)	61.1	144(a)	80.9	44(b)	61.1
	비영남	6(c)	54.6	186(d)	38.8	7(c)	63.6	192(d)	40.0
	χ^2		90.8**				90.3**		
새정치민주연합	영남	29(a)	16.3	24(b)	33.3	23(a)	12.9	21(b)	29.2
	비영남	5(c)	45.5	253(d)	52.7	4(c)	36.4	256(d)	53.3
	χ^2		73.2**				92.4**		
		호남		비호남		호남		비호남	
새누리당	호남	1(A)	1.7	8(B)	12.7	1(A)	1.7	7(B)	11.1
	비호남	0(C)	0.0	369(D)	60.0	0(C)	0.0	379(D)	61.6
	χ^2		118.5**				129.2**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49(A)	81.7	53(B)	84.1	52(A)	86.7	53(B)	84.1
	비호남	3(C)	100	206(D)	33.5	3(C)	100	196(D)	31.9
	χ^2		107.1**				125.7**		

자료출처: KSDC 2014, ** p<0.01

먼저, 영남 출신의 거주지 조합을 살펴보면,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출신지와 거주지가 모두 영남인 경우(79.8%, a)가 가장 높았으며, 출신지가 영남이고 거주지는 영남이 아닌 경우(61.1%, b), 출신지는 영남이 아니지만 거주지는 영남인 경우(54.6%, c), 출신지와 거주지 모두 영남이 아

닌 경우(38.8%, d)가 그 뒤를 따랐다(a>b>c>d). 각 조합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와 정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a<b<c<d).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기초비례대표선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예상과 달리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영남출신은 아니지만 영남에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

들이 차지하는 비율(63.6%, c)이 영남출신이지만 영남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61.1%, d)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b).

다음으로, 호남출신의 거주지 조합을 살펴보면,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례가 없는 경우(0.0%, C)를 제외하면 출신지와 거주지가 모두 호남인 경우(1.7%, A) 가장 낮았으며, 출신지가 호남이지만 거주지가 호남이 아닌 경우(12.7%, B)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출신지와 거주지 모두 호남이 아닌 경우(60.0%, D)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출신지와 거주지 모두 호남이 아닌 경우(33.5%, D) 가장 낮았지만,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C)를 제외하더라도 예상과 달리 호남출신이지만 호남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84.1%, B)가 호남출신이며 호남에 거주하는 경우(81.7%, A)보다 조금 더 높았다(A<B). 기초의회비례대표선거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에 대한 투표자의 비율은 A<B<D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투표자의 비율은 A>B>D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거주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보다 컸다.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각각 새누리당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편향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광역비례대표선거에서 타지로 이주한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61.1%가 새누리당에게, 그리고 타지로 이주한 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무려 84.1%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하였다.

둘째, 정당선호에 미치는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영남출신보다 호남출신의 경우 더 컸

다. 이미 앞서(표 4) 살펴본 것처럼,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영남에 거주하는 이들과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양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사이의 격차는 $0.4(=1.7-1.3)$ 이었던 반면, 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호남에 거주하는 이들과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의 격차는 $1.4(=|-3.8-(-2.4)|)$ 에 이르렀다.

셋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미친 ‘거주지 이전의 효과’는 호남출신보다 영남출신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광역비례대표선거와 기초비례대표선거에서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은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영남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각각 $18.7(=79.8-61.1)\%p$ 와 $19.8(=80.9-61.1)\%p$ 낮았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17.0(=33.3-16.3)\%p$ 와 $16.3(=29.2-1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남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서 타지로 이주한 이들이 각각 $11.0(=12.7-1.7)\%p$ 와 $9.4(=11.1-1.7)\%p$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4(=84.1-81.7)\%p$ 높거나 $2.6(=86.7-84.1)\%p$ 낮았다.¹⁰⁾

3. 투표결정요인: 출신지 vs. 거주지

아래의 <표6>의 모델 1, 2, 3, 4는 다항로지스틱모델(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이

10)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광역 및 기초 의회 선거에서 영호남출신의 거주지별 투표성향에 대해서는 <부록3>을 참조할 것.

용하여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본모델에는 새누리당을 기본범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투표여부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¹¹⁾ 독립변수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와 함께 호남출신-비호남거주(B)와 영남출신-비영남거주(b) 등 호남 및 영남의 출신지와 거주지 관련 터미변수들이 포함되었다.¹²⁾

아울러 기본모델에는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적 보수성 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연령, 소득수준, 이념적 보수성 등은 종속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거나, 이념이 보수적일 경우에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촉진할 것이며, 남성 또한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선호가 여성에 비해 약할 것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³⁾

- 11) 다만, 여기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정당에 대한 분석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12) 여기서는 호남출신-호남거주 또는 영남출신-영남거주 등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신지와 거주지별 조합에 따라 일관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대신하여 호남출신-호남거주(A)와 영남출신-영남거주(a)를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터미변수들의 기본범주로 사용하여 출신지와 거주지의 불일치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13)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도와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의 격차를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의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별(남성=1, 여성=0), 연령대(20대

호남출신 유권자들을 분석한 <표6>의 모델 1에서 잘 나타나듯이 광역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호남출신-비호남거주(B)가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2). 이는 최소한 이 모델에서 호남 거주여부가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비례대표의원선거를 분석한 이 표의 모델 2에서도 분석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영남출신 유권자들을 분석한 <표6>의 모델 3과 모델 4이다. 이 표의 모델 3에서 영남출신-비영남거주(b)는 호남출신-비호남거주(B)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남출신이며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a)에 비해서 영남출신이지만 비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b)은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가설 1-1). 기초비례대표의원선거를 분석한 모델 4에서도 거주지에 따른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은 이와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이 표의 모델 1, 2, 3, 4에 포함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적 보수성 등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의 모델 5와 모델 6은 최소자승모델(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이용하여 호남과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의 결정요인을 각각 분석한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수준(중졸 이하=1, 고졸 이하=2, 전문대 이하=3, 4년제 대학 이상=4), 소득수준(200만원 미만=1, 200만원-399만원=2, 400만원-599만원=3, 600만원 이상=4), 이념적 보수성(0-10: 0=진보, 10=보수).

것이다. 이 두 모델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비호남지역 거주자가 호남거주자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비영남 거

주자가 영남거주자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주지 이전 효과가 영남출신(0.83)보다 호남출신(-1.00)에 게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및 정당선호 결정요인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광역시비례 (호남)	기초비례 (호남)	광역시비례 (영남)	기초비례 (영남)	정당선호 [‡] (호남)	정당선호 [‡] (영남)
정당선호 [‡]	1.02*** (0.331)	1.36*** (0.527)	0.90*** (0.148)	1.05*** (0.171)		
호남출신- 비호남거주(B)	0.94 (1.590)	2.01 (1.942)			-1.00** (0.405)	
영남출신- 비영남거주(b)			1.26** (0.508)	1.31** (0.551)		0.83** (0.323)
남성	-1.15 (1.295)	-1.38 (1.418)	-0.10 (0.439)	-0.90 (0.502)	0.52 (0.413)	0.11 (0.268)
연령	-0.51 (0.600)	-0.32 (0.586)	-0.11 (0.197)	0.08 (0.218)	-0.23 (0.176)	-0.27** (0.122)
교육수준	-0.59 (0.713)	0.18 (0.864)	-0.01 (0.277)	-0.08 (0.303)	-0.53** (0.257)	0.54*** (0.171)
소득수준	-0.37 (0.860)	-1.32 (1.095)	0.25 (0.343)	0.27 (0.381)	0.51 (0.321)	-0.10 (0.197)
이념	-0.44 (0.399)	-0.59 (0.464)	-0.06 (0.149)	-0.07 (0.165)	-0.51*** (0.125)	-0.89*** (0.076)
상수	7.75 (4.267)	7.50 (4.421)	-1.15 (1.522)	-1.54 (1.670)	6.44*** (1.153)	3.32*** (0.854)
사례수	158	158	318	318	158	318
(Pseudo)R ²	0.33	0.32	0.30	0.30	0.21	0.47

[‡] 새정치민주연합 선호도-새누리당 선호도, 괄호안의 수는 표준오차, *** p<0.01, ** p<0.05
자료출처: KSDC 2014

지금까지 살펴본 <표6>의 분석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호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영남출신 유권자들에 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가설 2). 정당선호의 경우와 달리 이처럼 거주지 이전이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호남출신 유권자들보다 영남출신유권자들에 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불균형(disparity)의 원인은 무엇보다 타지거주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결집력과 호남지역에서 나타나는 ‘항의투표’ 성향의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시기마다 호남향우회 등을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활용해왔으며 최근에도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출신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호남출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는 ‘항의투표(protest voting)’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선거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광역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선거에서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 또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당선호와 투표선택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현행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기성정당 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당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가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피해자는 군소정당지지자들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은 지역정당이 지역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하지 못하고 지역정당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행선거제도하에서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적 투표의 족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정당선호와 투표성향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이 타지로 이주할 경우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선호와 투표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들을 제시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후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영호남을 대표하는 양당에 대한 선호도 격차(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역정당들에 대한 영호남출신의 상대적 정당선호도는 영호남에 그대로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서 타지로 이주한 이들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호남출신 응답자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와 영남출신 응답자의 새누리당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모두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정당선호에 대한 ‘거주지 이전의 효과’는 영남출신 유권자들보다 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6대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출생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투표결정 또한 정당편향적이었다. 그런데, 투표결정에 대한 ‘거주지 이전의 효과’, 즉 거주지를 타지로 이전한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정당편향적 투표결정이 감소하는 경향은 호남출신보다 영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호남에 그대로 거주하는 이들과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 사이의 격차보다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영남에 그

대로 거주하는 이들과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게 투표한 이들의 비율 사이의 격차가 더 컸다.

셋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의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서만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호남에 그대로 거주하는 이들’보다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1-2). 하지만, 영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의 효과, 즉 영남출신 유권자들 가운데 ‘출생지에 그대로 거주하는 이들’보다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엇보다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의 거주지 이전에 따라 ‘정당선호’와 ‘지역주의적 투표결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들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disparity)’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고 여겨져 왔던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편향적인 정당 선호가 거주지 이전으로 약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영남출신 유권자들에 비해서 더 컸다는 사실은 지역정당에 의해 지배되어온 한국의 정당정치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양당에 대한 투표결정에서 이들의 정당편향성은 거주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당선호에 대한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호남출신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정에 대한 거주지 이전 효과는 영남출신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난 것은 출신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더라도 이것이 영호남출신의 정당편향적 투표성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영호남출신의 정당편향적 투표가 단순히 이들의 편향적인 정당선호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영호남 유권자들은 지역정당이 자신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지역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10점 만점에서 6점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신지역 정당에게 투표하는 비율은 광역의회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무려 80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와 이로 인한 영호남 일당지배체제의 재생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이들의 정당선호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동천 2015).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역주의적 투표의 완화를 위해 유권자들의 자성과 메니페스토 운동 등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의적 투표’가 영호남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다가온 시점에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합의제적 정치문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시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심연수 2010).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제도

의 개혁이 필요하여, 특히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합의제적 선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집 2호, pp. 241-264.
- 김영태. 2009. “한국의 선거와 출신지역.” 『현대정치연구』 제2집 2호, pp. 61-85.
- 김성모·이현우. 2015. “출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지역주의 행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5호, pp. 243-266.
- 김욱. 2004a. “17대 총선과 충청권 정치지형의 변화: 지역주의의 약화 및 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7집 1호, pp. 69-87.
- 김욱. 2004b.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pp. 83-105.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현대정치연구』 제3집 2호, pp. 89-114.
- 박동천. 2015.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간추린 역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9집, pp. 5-31.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pp. 113-134.
- 박정서. 2012. “정치사회화 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집 2호, pp. 89-105.
- 심연수. 2010.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7집, pp. 5-27.
- 양재열. 2006. “1850년 타협에 나타난 지역적인 갈등.” 『미국사연구』 제24집, pp. 139-169.
- 오관석. 2009. “지방자치이후 도시민 지역편견의 범주화.”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집, pp. 117-153.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2호, pp. 203-232.
- 지병근. 2013.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정당후보 득표율의 지역편향: 제18대 대선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2집 1호, pp. 141-172.
- 지병근. 2014a. “선거구 제도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 2010 기초의회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3집 2호, pp. 185-210.
- 지병근. 2014b. “호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특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1호, pp. 33-56.
- 지병근. 2014c. “한국진보정당의 조직, 이념, 그리고 지지기반.” 『현대정치연구』 제7집 1호, pp. 7-53.
- 지병근. 2015a.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1호, pp. 63-91.
- 지병근. 2015b. “영호남 유권자들의 정당편향성: 6·4 지방선거 사례 분석.” 『한국의 선거VI』 pp. 75-101. 서울: 오름.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

- 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pp. 375-394.
- 하세현. 2005. “영남 지역주의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1호, pp. 161-191.
- KOSIS국가통계포털. 2010. 인구·가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0)-국내인구이동통계(10% 표본), 현 거주지, 성, 연령 및 출생지별 인구-시도 5년 2010-20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parmTabId=M_01_01#SubCont, 2014.08.06.

References

- Hueglin, Thomas. 1986. "Regionalism in Western Europe: Conceptual Problems of a New Politic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18 (4): 439-458.
- Jensen, Merrill. 1951. *Regionalism in Ame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Jordan, Davis. 1994. *New World Regionalis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Toronto: The Free Press.
- Sasse, Gwendolyn. 2010. "The Role of Regionalism." *Journal of Democracy* 21 (3): 99-106.
- Schattschneider, E. Eric.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Farrar and Rinehart.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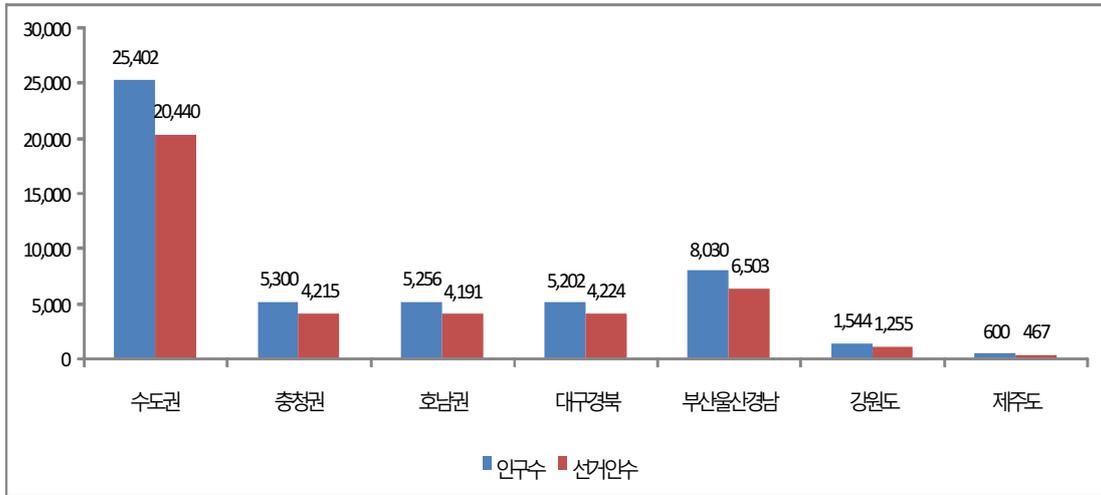
- Cho Ki-Suk. 1997. "Debate on Regionalism: A Critique of the Critical Theory Perspectiv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1 (2): 203-232.
- Choi Jun-Young and Cho Jin-Man. 2005. "Is Regional Cleavage in Korea Disappear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Ideological and Generational Effects on the Outcomes of the 17th Congressional Elec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 (3): 375-394.
- Ha Se-Hun. 2005. "Changes in Youngnam Regionalism."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27 (1): 161-191.
- Jhee Byong-Kuen. 2013. "Regional Bias of Electoral Support for Two Major Party Candidates."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2 (1): 141-172.
- . 2014a. "Magnitude of District and Voting Choice of Minor Party Supporter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10 Municipal Council Elec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olitics* 23 (2): 185-210.
- . 2014b. "Issue Position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of Honam Voter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4 (1): 33-56.
- . 2014c. "The Organization, Ideological Orientation, and Electoral Base of Progressive Parties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7 (1): 7-53.
- . 2015a. "Changes in Regional Antagonism and Its Causes in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14 (1): 63-91.
- . 2015b. "Partisan Bias of Youngnam and Honam Voters: A Case Study of 6.4 Regional Election." *Korean Election VI*, 75-101. Seoul: Orum.
- Kang Won-Taek. 2010. *Changes and Continuity of Korean Electoral Politics: Ideology, Issue, Campaign, and Voting*. Seoul: Nanam.
- Kim Jin-Ha. 2010. "The Change of Korean Regionalism: A View on Voting Behaviors and Political Parties."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3 (2): 89-114.
- Kim Seong-Mo and Lee Hyeon-Woo. 2015. "New Approach of Regionalism Based on Hometown: Residents and Non-Hometown Resident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9 (5): 243-266.

- Kim Wook. 2004a.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and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Chungchung Reg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Weakening and Change of Regionalism."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7 (1): 69-87.
- . 2004b.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spect for Changes in Korean Regionalism: With Particular Focus on Daejeon-Chungchung Region."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14 (1): 83-105.
- Kim Young-Tae. 2009. "Presidential Election and Regional Cleavage in Korea: Focused on the 15-17th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Capital Area."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2 (2): 61-85.
- Ko Sang-Tu. 2012.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Integration Model of Immigrants: Cases of the Netherlands, Germany, and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 (2): 241-264.
- KOSIS National Statistics Portal, Population·Family-Census-Part of Population-Population of Census (2010)-Statistics of Changes in Domestic Population (10% Sample), Current Residential Area, Gender, Age, and Population by Birth Area-Cities and Provinces by 5 years 2010 - 20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 E&parmTabId=M_01_01#SubContent, 2014.08.06.
- Oh Kwan-Suk. 2009. "Categorization for the Prejudice of Citizens in Local Autonom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4: 117-153.
- Park Dong-Chun. 2015. "A Short History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9: 5-31.
- Park Jung-Suh. 2012. "Research on the Citizenship of North Korean Immigrants based on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ies and Implication in Civic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51 (2): 89-105.
- Park Sang-Hoon. 2001. "Regionalism and Voting Behavior in Korea in the 16th General Elec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 (2): 113-134.
- Shim Yeon-Soo. 2010. "The Meaning of Political Citizenship in Korean Socie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7: 5-27.
- Yang Jae-Yul. 2006. "The Compromise of 1850 and Sectional Conflict : The Senate in the 31st U.S. Congress."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24:
139-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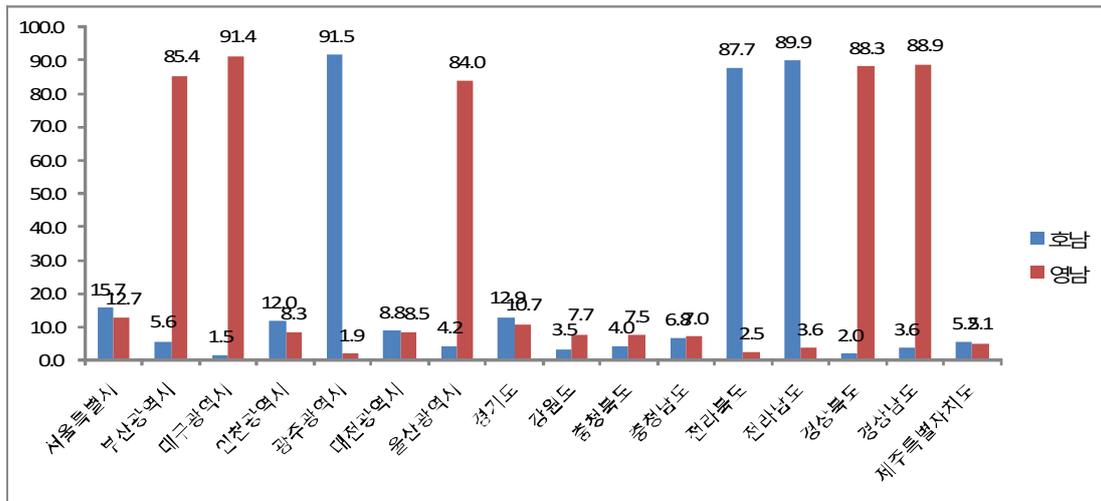
한국에서 거주지 이전이 정당선호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영호남출신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75

<부록 1-1> 2014년 지방선거 시기 인
구수와 유권자수(단위, 천명)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부록 1-2> 거주지별 영호남출신의 비율
(2010년 기준)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출처: KSDC 2014

<부록 2> 거주지별 출신지 분포

출신지 거주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강원	제주	이북/ 해외	전체
서울	66	28	35	28	16	11	15	0	1	200
	33.0	14.0	17.5	14.0	8.0	5.5	7.5	0.0	0.5	100.0
인천/경기	37	118	42	39	31	16	27	2	0	312
	11.9	37.8	13.5	12.5	9.9	5.1	8.7	0.6	0.0	100.0
대전/충청	3	2	69	7	3	2	1	1	0	88
	3.4	2.3	78.4	8.0	3.4	2.3	1.1	1.1	0.0	100.0
광주/전라	1	1	1	85	0	0	0	0	0	88
	1.1	1.1	1.1	96.6	0.0	0.0	0.0	0.0	0.0	100.0
대구/경북	1	2	0	0	94	3	0	0	0	100
	1.0	2.0	0.0	0.0	94.0	3.0	0.0	0.0	0.0	100.0
부산/울산	2	4	3	2	12	138	0	0	0	161
	1.2	2.5	1.9	1.2	7.5	85.7	0.0	0.0	0.0	100.0
강원	3	0	2	1	1	1	30	0	0	38
	7.9	0.0	5.3	2.6	2.6	2.6	79.0	0.0	0.0	100.0
제주	0	0	12	0	1	0	0	0	0	13
	0.0	0.0	92.3	0.0	7.7	0.0	0.0	0.0	0.0	100.0
전체	113	155	164	162	158	171	73	3	1	1,000
	11.3	15.5	16.4	16.2	15.8	17.1	7.3	0.3	0.1	100.0

자료출처: KSDC 2014

<부록 3> 출신지 및 거주지별 투표정당

출신지	거주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영남	영남	120	67.4	27	15.2	143	80.3	21	11.8
영남	비영남	55	76.4	17	23.6	39	54.2	32	44.4
비영남	영남	5	45.5	1	9.1	7	63.6	3	27.3
비영남	비영남	220	45.8	244	50.8	180	37.5	271	56.5
		광역의회				기초의회			
영남	영남	138	77.5	31	17.4	132	74.2	201	41.9
영남	비영남	49	68.1	22	30.6	45	62.5	24	33.3
비영남	영남	6	54.6	5	45.5	8	72.73	3	27.3
비영남	비영남	199	41.5	261	54.4	201	41.88	241	50.2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호남	호남	1	1.7	48	80.0	0	0.0	44	73.3
호남	비호남	10	15.9	50	79.4	10	15.9	50	79.4
비호남	호남	0	0.0	3	100.0	0	0.0	0	0.0
비호남	비호남	389	63.3	188	30.6	359	58.4	230	37.4
		광역의회				기초의회			
호남	호남	1	1.7	48	80.0	2	3.3	43	71.7
호남	비호남	10	15.9	51	81.0	10	15.9	49	77.8
비호남	호남	0	0.0	3	100.0	0	0.0	3	100.0
비호남	비호남	381	62.0	217	35.3	374	60.8	191	31.1